

주간 통일정세

2015-46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한, 실천으로 관계개선 의지 보여야”(11/1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일 “8·25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화가 열리지 않는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지적함.
 - 조평통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당국은 당국회담과 관련해 ‘북이 묵묵부답하고 있다’느니, ‘호응’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는가 하면 현 집권자까지 나서 ‘북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마치 저들이 북남관계개선에 관심 있는 듯이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어 “이것은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또한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에 역행해 대화 상대방을 부정하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북침전쟁 불장난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핵 및 인권 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헐뜯으며 “북남관계는 그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개선될수 없고,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속에 없는 말장난을 부릴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버리고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 북한 “남측, 서해 우리수역 목표 해상사격시 응징” 주장(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은 22일 담화에서 “남한군이 23일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155mm 자행곡사포 K-9와 130mm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스파이크, 무장 헬기 AH-1S를 비롯한 살인장비들을 동원해 또다시 우리측 수역을 향해 도발적인 해상사격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은 또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5년전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불순한 군사적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8·25 합의가 진실로 소중하다면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방함.

- 대변인은 우리 해병대 사령부가 연평도 포격도발의 공식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려는 취지”라면서 “역사 왜곡과 사건 날조에 이골이 난 자들만이 고안해낼 수 있는 희비극”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또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이 연평도 포격전의 명칭을 바꾸는 유치한 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또 하나의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처사”라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매체, 남북대화 촉구에 “책임 전가” 주장(11/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보도를 통해 남한 정부가 최근 북한에 ‘8·25 합의’ 이행을 위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 데 대해 남북관계 담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대는 대화 타령에는 북남합의 이행과 관계개선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책임을 모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흥심이 깔려있다”고 밝힘.
 - 매체는 “남조선 집권자가 정상회담을 운운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북의 태도 변화’라는 조건부를 단 것은 대화 타령 속에 숨겨진 체제 대결, 반공화국 압살 흥심을 드러내 보이게 한다”며 “이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대화를 표방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이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이 있다면 대화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북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하자” 제의(11/20,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20일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통일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두 달 가까이 북측에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촉구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호응한 것은 다행”이라고 전함.

- 남과 북이 지난 8월 25일 관문점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당국 회담의 의제와 급을 조율하는 실무회담을 우선 갖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뉴스는 덧붙임.

라. 대남 군사 관계

- 남, 23일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북 “우리수역 목표시 응징”(11/2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22일 “우리 군은 23일 서북도서의 우리 측 해역에서 계획된 (해상)사격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에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23일 서해 열점(접적)지역에서 아군(북측) 수역을 목표로 한 남조선 군부의 해상사격이 강행되는 경우 5개 섬 수역에 대한 서남전선 군부대들의 무자비한 응징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은 “남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155mm 자행곡사포 K-9와 130mm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스파이크, 무장 헬기 AH-1S를 비롯한 살인장비들을 동원해 또다시 우리 측 수역을 향해 도발적인 해상사격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또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5년 전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불순한 군사적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8·25 합의가 진실로 소중하다면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방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북한 표준시 반영해 개편한다(11/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현재 개성공단 남북출입사무소(CIQ)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전자출입시스템(RFID)이 북한 표준시 변경을 반영해 개편된다고 보도하면서, 2억 7천 400만 원 규모인 이번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 표준시 변경에 따른 주요 로직 수정·보완 및 시스템 대응이라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 출입 관련 서류에는 남측시간과

북측시간을 병기하고 있으므로 전자출입시스템도 출입계획 시간 조회 등에서 양측 시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새로 추가될 기능 중에는 일 단위 상시통행 시행을 대비해 심사율을 높이고, 개성공단 방문 신청 및 승인 자료를 남측과 북측이 문서 파일 형태로 주고받도록 하는 내용, 방화벽·침입탐지 등의 기능이 있는 통합 보안장비 도입 등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무단입북 우리 국민 1명 판문점 통해 송환(1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7일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지난 9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무단 입북했던 이모(48)씨를 송환했다고 보도함.
 -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오늘 오전 9시 45분께 북한 적십자 중앙위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단속된 우리 국민 한 명을 오후 4시 30분께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힘.

- 北, 우리 5군단이 11.16~20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전하며 ‘남조선 호전광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11.16, 중앙방송)
-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11.5)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 발언(통일을 앞두고 역사 가치관 매우 중요)에 대해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대결망동’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는 체제통일의 어리석은 개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난(11.17,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이란 외무장관 회담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北, 이란 핵타결서 교훈 얻기 바란다, 이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함)에 대해 ‘핵공조 구걸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북핵공조 놀음으로 얻을 것은 쓰디쓴 자멸뿐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11.17, 중앙통 신·민주조선)
- 北, 서울에서의 민중총궐기 집회(11.14)를 언급하며 ‘파쇼 경찰이 수 만 명의 폭압 무력을 내몰아 민중총궐기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고 비난(11.17,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파쇼독재와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부활시키고 역사의 궤도를 되돌려 세우려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라며 ‘즉각 철회’ 주장(11.18, 중앙통신)
-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극히 반통일적 대결광대극, 역사쿠데타’라며 ‘친미 친일사대매국정권을 무한정 연장하려는 南 집권자의 흥심’이라고 비난(11.22,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배격…적대세력의 모략 책동”(1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며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전형적 실례인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을 우리에게 대한 극단한 정치적 도발 문서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결의안 강압 채택 높음은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린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인권 모략 책동의 본질과 부당성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난함.
 - 이어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비극적인 사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실로 감행되는 내정간섭을 허용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며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모략에 강경 대응하는 우리 입장이 천백 번 정당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는 인권 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만 불순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그에 맞는 해당 조치들을 강구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일본 군위안부 배상하라” 거듭 촉구(1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으로 “장장 40여 년 동안 우리 인민에게 방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16일 보도함.
 - 대변인은 “패망한 지 70년 넘도록 과거청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며 “(일본이 오히려) 강제연행된 조선 청장년을 자원한 사람들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에 대한 청산은 회피한다고 해서 모면할 수 있고 뺄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을사늑약 110년’ 맞아 사과거사 성토…“강도적 침략”(11/17,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7일 ‘강도적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이란 정세론 해설을 통해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했다”고 성토했으며, 이를 “합법적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라며 “일본반동들이 자기의 과거 죄악을 부인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는 절대로 왜곡될 수 없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조선사람을 강제연행해 노예 노동을 강요했던 공장, 탄광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해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왜곡 미화하는가 하면 집권자의 ‘전후 70년 담화’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구까지 빼버려 과거 죄행을 정당화해 피해자인 전체 조선 민족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도 ‘을사5조약일을 맞아 일본정부에 과거청산 요구’라는 보도에서 “일제가 불법 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오늘 우리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안고 일제의 죄악에 찬 역사를 다시금 돌이켜 보고 있다”며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백 년 숙적인 일본반동들과 끝까지 피의 결산을 하고야 말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 과거 역사의 반성과 청산을 요구함.

사. 대러시아

- 러 법무장관 방북…사법공조 협정체결(11/17, 자유아시아방송, 타스통신)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러시아 간 사법공조가 부쩍 강화되고 있다며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법무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법무부 대표단이 17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함.
 - 타스통신에 따르면 코노발로프 장관 일행은 이번 방북에서 북러 양국 간 사법분야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 기업 간 계약과 법적 규제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아. 국제기구

- 북한 대사, 유엔서 “인권결의안은 악의적 중상모략”…폐기 요구(11/18, AFP, AP통신)
 - 북한의 리홍식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결의안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발의한 유럽연합(EU)과 일본에 폐기를 요구했다고 AFP, AP통신이 18일 보도함.
 - 매체는 지난 10월 30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 리 대사가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악의적 중상모략이자,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인권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임.
 - 이어 리 대사는 “우리는 EU와 일본이 즉각 결의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다른 국가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의 결점을 바로잡고, 자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반성하기 바란다”고 전했으며,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고 강제노동에 관련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자 조작”이라고 주장함.
- IAEA “북 핵 심각한 우려…현장 검증 필요”(11/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회의에서 연례 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에 핵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IAEA는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었으며, IAEA 검증 요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현안 등을 해결하는데 즉각 협조할 것을 요청” 했다고 전함.
- 유엔 “반기문 총장 방북 논의 진행중”…방북 추진 공식 시인(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유엔이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전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반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그간 반 총장이 특정 시점에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나 예측이 나올 때마다 “해당 시점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도 방북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 총장의 방북 추진이 사실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와 관련하여 “(반 총장의 방북 발표는) 유엔 대변인 또는 관련 유엔 직원 또는 반 총장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함.

자. 기타 국가

- ‘반미 우방’ 북한·시리아, 문화 분야도 협력(11/18, 미국의소리, 시나통신)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8일 북한과 시리아가 올해부터 3년간 양국의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행 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방송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열린 계획서 체결에 장명호 시리아 주재 북한대사와 이썸 카릴 시리아 문화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계획서에는 영화와 음악, 연극, 조형예술 분야 협력을 비롯해 양국 문화의 날 행사 개최, 음악원과 연극원 간 협력 및 지원,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 ‘마리우스 비저’ 국제유도연맹 위원장, 11월 16일 평양 도착(11.16, 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과 일행, 11월 16일 앙골라공화국 공식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환(1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11월 15일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同國 외무장관(로랑 파비우스)에게 위로 전문(11.17,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유도연맹 위원장(마리우스 비저)과 담화(1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신중수), 11월 17일 평양에 도착하고 만수대연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1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러셀(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北 비핵화 수용(北, 비핵화 나서면 평화체제·관계정상화 등)’ 촉구 발언에 대해 ‘평화협정체결은 北-美間 제기되는 모든 문제해결의 관건, 한반도 평화·안전 보장의 유일한 방도’라고 ‘미국의 정책결단’ 촉구(11.18, 평양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8일 이임 주북 쿠바 대사(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면담(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11월 18일 이임 주북 쿠바 대사에게 ‘친선훈장 제1급’ 수여 및 김영남 등 참가(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총 부위원장), 11월 18일 러시아 사법성 대표단(단장 :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장관)과 면담 및 ‘김정은 선물’ 접수(11.18, 중앙통신)
- 안광일 인도네시아 주재 北 대사, 11월 13일 주재국 대통령(조코 위도도)에게 신임장 전달(11.18, 평양방송·중앙통신)
- 국제유도연맹 위원장, 11월 18일 평양 출발(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의 안보법 개정과 무력증강을 거론하며 ‘아시아를 제패하려 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 목표’라며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침략전쟁을 꿈꾸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11.19,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자유아시아방송(RFA)의 ‘北 조선중앙통신, 악성코드 유포 해킹’ 주장은 ‘선군조선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차단해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계획적인 모략책동’이라며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선군조선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주장(11.19,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가나 대사(아나니 오쿠미니 데무야코르) 신임장 접수 및 담화(11.19, 중앙통신)
- 박지환 적도기니 주재 北 대사, 11월 10일 주재국 민주당 총비서(헤로니모 오사 에코로)와 담화(11.20, 중앙통신)
- 北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단장: 전기철 국장), 11월 19일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9차 회의’(영국 런던) 참가차 평양 출발(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단장 에르데네 바트-울 수도행정장관 및 시장), 11월 19일 평양 도착(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사법성 대표단(단장: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사법상), 11월 19일 귀국 (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이 동북아에서 경제적·군사적 지배권이 좁아지고 있는데 불안을 느끼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 아·태지역에 무력증강으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21세기의

- 냉전에서 승자가 되려 하지만 패배자는 미국'이라고 주장(11.2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대외경제투자협력위, 독일 동아시아협회와 '양해문' 체결(11.20, 중앙통신)
-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단장: 에르데네 바뜨-울 수도행정장관 겸 시장), 11월 20일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에 헌화(1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오바마 행정부의 對北 '전략적인내' 정책은 "철저한 실패작으로 미국의 쇠퇴를 촉진하고 있다"며 '對北 적대시정책 철회 및 평화협정체결 호응 정책결단' 촉구(11.21, 중앙통신)
- 미국의 '인권유린범죄(백인경찰의 흑인사살·아프가니스탄 병원공습)'를 거론하며 "미국은 인권재판관이 아니라 피고석에 끌어내야 할 범죄자"라며 "인권재판관 행세('인권보고서' 등 발표)" 비난(11.21,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군사 대표단(단장 :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11월 21일 라오스·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차 평양 출발(11.21, 중앙통신·평양방송)
- 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단(단장 : 채춘희 부위원장), 11월 21일 쿠바(국제민주여성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참가)·페루 방문차 평양 출발(11.21, 중앙통신·평양방송)
- 하권일駐알바니아 北대사, 11월 17일 同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11.22, 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인민배우 전우봉 사망...김정은 화환(1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전우봉 김원균명칭평양음악종합대학(전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학부 전 교수가 83세로 사망했음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사망일시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가 전우봉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 17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북한 김정은 "3대혁명운동 더욱 힘있게 벌어나가야"(1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당 제1위원장이 20일 평양에서 개막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람들의 사상개조나 생산보다 꾸리기 같은데 편중하는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단위들에서는 조건에 빙자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3대혁명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의 지도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편향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편향을 극복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한다”며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은 “당원과 근로자, 특히 청년들 속에서 이색적인 생활 풍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적이며 민족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김기남 당비서는 보고를 통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체육계 실세 손광호, 지난달 ANOC 총회 참석차 방미(11/1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체육계의 실세로 꼽히는 손광호 체육성 부상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고 20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손 부상이 지난달 29~30일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에 참석했다고 덧붙였으며, 이에 오리 아브라모위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 올림픽위원회 인사들의 워싱턴DC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총회 참석 외에 이들의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복권(1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기술로 개발한 지하철동차의 시운전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이 올해 3월 초 이후로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다가 8개월 만에 재등장하여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北 청년동맹 제9차 대회, 내년 5월 당대회 이후로 연기(11/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청년동맹 제5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청년동맹 창립 일흔 둘을 맞으며 소집하기로 돼 있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당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보도함.

- 통신은 확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벽찬 투쟁에서 새로운 영웅천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백두산 청년강국의 위용을 다시 한 번 힘있게 펼쳐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어머니 날’에 여성역할 강조…‘代이은 충성’ 유도(11/16,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TV, 조선의오늘)
 - 노동신문은 16일 ‘우리 어머니들은 백두산 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어 가는 애국자들이다’라는 사설에서 “어머니들은 강성 조선(북한)의 기둥감,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을 역세게 키워나가는 밀뿌리로,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꾸려가는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어머니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크나큰 공지를 안고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적 헌신성으로 김정은시대를 빛내어 가고 있다”며 어머니를 비롯한 북한 여성들에게 대를 이은 충성을 요구함.
 - 우리민족끼리는 “어머니 날은 자식들이 어머니들을 축하해 주는 날”이라며 “많은 사람이 어머니에게 축하 엽서도 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가 식사도 하고 있다”고 어머니 날을 맞은 사회 분위기를 전함.
 - 조선의 오늘은 16일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란 글에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어머니라 부르는 위대한 노동당의 품이 있어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그토록 값높고 긍지로운 것”이라며 어머니와 노동당을 동일시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조선중앙TV도 16일 ‘어머니의 마음’, ‘빨간 별들의 자랑-어머니 날을 축하해요’, ‘온 나라 아들 딸들을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등 어머니 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함.

- 김일성정치대학에 김일성·김정일 새 동상 건립(1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김일성정치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제막식이 20일에 성대히 진행됐다”고 전함.
 - 제막식에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과 리영길 총참모장을 비롯한 인민군 지휘성원과 대학의 일꾼들, 교직원, 학생, 각급 군사학교 일꾼들, 인민군 장병, 군인가족 등이 참가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北, 축구 이어 ‘농구 띄우기’...“김정일 업적 지키는 문제”(11/22,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전국노동자농구경기대회’ 개·폐막 소식을 전하며 “원수님(김정은)이 지난 9월 농구 종목 발전은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체육부문에 쌓아올린 장군님(김정일)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그러면서 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농구 종목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 귀중한 가르침을 줬다”면서 “농구경기대회는 주체혁명 위업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는 노동계급의 정신력과 단결력, 체육기술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함.

- 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45.11.18) 70주년 중앙보고회, 11월 17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1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4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 11월 17일 평양 도착(11.17,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 현지지도(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축산물 종합가공공장·축산학연구소 등) 정형 현지 요해 및 관계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애국품’을 널리 퍼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 토의(11.18, 중앙통신)
-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총 제5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1월 18일 평양에서 진행 및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보고) 및 청년동맹 중앙위원과 중앙·지방의 청년동맹 일꾼들 참가(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경기(2~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 총화모임, 11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참가(11.18, 중앙통신)
-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폐막식, 11월 18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및 김용진(내각

- 부총리)·최상건(黨 부장)·김승두(교육위원장)·장철(국가과학원장) 등 참가(11.18, 중앙통신)
- 김기남·최태복·곽범기·오수용 등 黨 비서들과 黨 중앙총 일꾼들, 11월 18일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11.18,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19일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 전동차의 시운전 참관(1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사법검찰기관 창립('45.11.19)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11월 19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11.19, 중앙통신)
 - 제4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및 대성산혁명 열사능 등 참관(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황창봉(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1동 60인민반)의 100세 생일상 전달(11.20, 중앙통신)
 - 제4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선구자대회, 11월 20일 평양에서 개막(11.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성심성의 지원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22, 중앙방송)
 - 제4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선구자대회, 11월 21일 함광철('청년동맹' 부위원장) 등 토론과 '김정은에게 전하는 맹세문' 채택 후 폐막(11.21, 중앙방송·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760호(11.11호),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 붉은기(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등)·2중3대혁명붉은기(만경대닭공장 후보2직장 등)·3대혁명붉은기(평양건축종합대학 등)' 수여(11.21, 중앙방송)
 - 도당 책임비서들과 내각, 성, 중앙기관일꾼들, 11월 22일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참관(11.22,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 경제발전 4개년 계획 작성(11/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노동당 중앙위가 내년 5월로 예정된 7차대회에서 제시할 인민경제발전 4개년 계획을 작성하도록 내각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위해 내각 산하 각 부처들이 지방 현지를 답사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함.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경제발전 4개년 계획은 내년 5월 초에 진행될 노동당 제7차대회의 중요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며 이는 1980년대 북한의 국가운영 방식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어 개혁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각 도당 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오는 12월 초 평양에 모여 당 대회준비를 위한 회의를 갖게 된다”며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함.

나. 주요 조치

- 북한 나선경제특구 ‘자본주의식’ 모델 적용…‘개방실험’ 나섰다(11/18, 내나라)
 - ‘내나라’는 18일 중앙급 경제특구인 나선(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나선경제특구)에서 활동할 북한 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능한 북한기업과 관련 사업의 이름을 공개하여 나선경제특구를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사업)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는 등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함.
 - 매체는 50여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외국투자의 법률적 기초와 제도적 환경을 마련했으며, 합법적인 이윤과 이자, 이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익금 같은 소득을 제한 없이 북한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투자 정책 분야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비법적인 간섭은 할 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종합 개발 계획에는 “기업 또는 다른 나라 개인업자는 지대 안팎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상품, 봉사, 기술거래, 수출입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은 유효기간 안에 토지 이용권과 건물 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저당할 수 있다”고 명시함.
- ‘100년만의 왕기름’ 겪은 북한, ‘물절약 농법’ 권장(김일성종합대학학보, 7/20; 1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2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5년 3호(7월20일 발행)에는 ‘물 절약형 농법을 도입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라는 제목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쌀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농법을 소개한 글이 실려 있음.
 - 이 글은 영양알모(한 개의 영양알에 씨앗이 2~3알씩 들어가는 형태의 모) 농법의 경우 모에 물을 4~7일에 한 번씩만 주면 돼 물을 아끼는 동시에 수확량은 일반 모를 심은 논보다 정보(약 9천900m²)당 약 437kg 많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월성과 생활력이 입증된 우리 식의 물 절약형 농법을 모든 영농공정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적은 물로 정보당 알곡 소출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함.

다. 경제 상황

- “北 김장·수확 끝나면서 남새·쌀 가격 하락…쌀 4700원”(11/16,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11월에 접어들면서 쌀과 남새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김장철이 끝나는 시기이고 벼 탈곡을 시작한 시점이어서 시장 물가 변동이 있다”면서 “김장철인 10월 중순에는 배추 1kg에 1950원까지 올랐었는데 10월 말부터는 1500원으로 내려가더니 이달 초부터는 9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배추뿐 아니라 벼 탈곡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쌀 가격도 5200원에서 4700원으로 내렸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당, 행정, 근로단체에 소속된 모든 주민들은 결산총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제 수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대신 내고 과제수행을 했다고 인정받고 있다”면서 “돈을 대신 내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수확한 농산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함.
 - 소식통에 따르면 헤산시 기준으로 지난 10월 중순 휘발유 1kg은 6000원, 디젤유 1kg은 4000원이었으나 11월 초 소폭 올라, 휘발유 1kg은 7000원, 디젤유 1kg은 4500원에 거래되었으며, 이후 11월 중순 현재 휘발유는 7300원, 디젤유는 5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임.
- 北주민, 김정은 처적 평양고층아파트 입주 꺼린다는데…(11/16,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6일 보도에서 최근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에게 배정되고 있지만 정작 분양 받은 주민들은 이곳으로의 이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새집임에도 난방 및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함.
 - 평양 소식통은 “온수 공급과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돈주(신흥부유층)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이곳 아파트 시세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면서 “새 아파트 배정 대상자였던 과학자, 연구사들은 초기에

입주자 명단에서 빠질까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정작 주택이 배정되자 겨울철 난방이 안 되고 수도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종전에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 것을 후회한다”고 덧붙임.

- “평양서 택시비 북한돈으로 내면 상식 없는 사람”(11/17,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7일 평안남도 소식통이 “평양시에서 개인택시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화폐가 달러이면 정상적인 요금을 내면 되지만 국돈(북한)이면 5천원이 추가로 부과된다”면서 “외화가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유통화폐가 되면서 국돈을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시간비용이 5천원”이라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평양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지하철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면서 “택시비용 계산방법 자체가 달러로 되어 있어 국돈을 지불하는 경우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취급되며 택시기사도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北대학생, 통화도 안하면서 핸드폰 ‘꼭’ 갖고 다니는 이유(11/17,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7일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최근 대학생들이 손전화(핸드폰)를 부모들에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부모들은 이런 성화에 못 이겨 사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손전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깔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이동통신기구판매소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휴대폰은 1300위안(북한 돈 약 156만 원) 정도이며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아리랑 터치폰(스마트폰)’은 2800위안(북한 돈 약 33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양강도 혜산시장의 쌀 1kg 가격이 5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휴대폰은 쌀 300kg, 아리랑 터치폰은 무려 쌀 660kg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함.

- 북 주민, 식수난 자체해결(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함경북도 청진시의 주민소식통을 통해 식수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현재 시에서 세대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왜정(일제) 때 묻은 수도관과 전력부족, 약한 수압으로 주민들이 수도물을 원만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약한 전력과 수압으로 물 부족현상이 계속되자 청진시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최근 자체로 양수기를 구입, 설치해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고, 청진시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물 부족 사태에 지친 상태여서 당국에 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함.

- 오라스콤, 북한 고려링크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11/1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보도에서 북한 휴대전화 업체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통신업체 오라스콤(OTMT)이 고려링크를 계열사(subsidiary)에서 분리해 협력(associate)업체로 전환한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이에 오라스콤은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KPTC)와 논의 중인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계열사로 있으면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회계기준(EAS)과 국제회계기준(IFRS)을 모두 부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협력사로 전환시켰다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WFP 대북 영양지원 모금액, 목표액 절반 수준”(11/1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WFP의 자금 현황자료를 인용해 WFP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위해 모금한 금액은 8천890만 달러(약 1천42억1천만원)였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목표액 1억6천780만 달러(약 1천967억1천만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금액으로, 이로 인해 WFP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이에 방송은 WFP가 올해 말 종료하려던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올해 WFP의 대북 영양지원사업에는 러시아가 지원국 중 가장 많은 600만 달러(한화 약 70억3천만원)를 냈고 이어 스위스 593만 달러(약 69억5천만원), 호주 230만 달러(약 26억9천만원), 한국 200만 달러(약 23억4천만원), 캐나다 160만 달러(약 18억7천만원), 중국 100만 달러(약 11억7천만원) 등의 순서라고 덧붙임.

- 중, WFP 대북식량지원 100만 달러(11/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 자금정보를 분석하여 중국이 북한주민의 영양지원을 위해 2015년 11월 초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도함.
 - 정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중국이 유엔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자금은 모두 500만 달러에 달하며, 세계식량계획은 이번 중국의 지원액으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량가공공장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강화비스킷을 만드는 재료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북 선박, 중 단둥항에서 모습 감춰(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단둥의 한 무역회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8월 하순부터 북한선박이 단둥항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둥항의 운영권을 확보한 Y건설 집단 측에서 국제무역항인 단둥항의 환경보호를 위해 석탄 등 오염유발 물질의 입항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북한산 석탄은 주로 단둥항을 통해 반입되었는데 단둥항을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시키려는 단둥시 당국과 항만운영을 맡은 Y건설 집단의 방침에 따라 석탄 배의 입항과 하역이 중단된 것이 원인이라고 함.
- 평안북도 신의주시, 산림복구사업에 주력(11.17, 중앙방송)
 -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준공식, 11월 17일 희천9호발전소에서 진행(11.18, 중앙통신)
 - 강원도 수산관리국 및 산하 수산사업소 일꾼들, 보름 남짓 기간 '지난해 同期 대비 3배 이상 물고기 잡이 성과' 선전(11.18, 중앙방송·노동신문)
 - 함경남도 룡전 과수농장지구에 북청사과연구소(보존실·분석실·정보실 등 구비) 새로 건설(11.18, 중앙방송)
 -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5'(11.19~26) 개막식, 11월 19일 농업과학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진행(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석탄공업부문 청년돌격대원들, 연간 골진계획 초과 수행(11.19, 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종자보관고와 과학기술보급실 및 축산기지건설을 완공(11.20, 중앙방송)
 - 北 각지, 수지관을 이용한 온실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11.20,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WHO 지원 아래 전국적 결핵조사 첫 실시(11/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8일 세계보건기구(WHO)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도함.
 -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키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여름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몽골에서 실시된 결핵 실태조사에 관계자들을 파견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과 유병률(Prevalence of bacteriologically confirmed pulmonary TB cases)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조사 방법은 북한 내 57개 도시와 38개 농촌 지역, 그리고 5개 특별 지정 구역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그중에서 15세 이상 주민 7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은 개인면담과 흉부 X선 검사, 결핵균 검사(객담 도말검사) 등을 통해 결핵 감염 여부를 검사 받게 된다고 방송은 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탈북민 7명, 태국서 체포…한국행 희망”(11/2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태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 태국 경찰이 북부 메콩강 근처에서 탈북민 7명을 발견해 구속했으며 이들 탈북민은 20대에서 70대의 남녀로, 모두 여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왔다”며 “태국에서 구속되면 한국 대사관에 넘겨지고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 해외일꾼, 독일·중국서 잇따라 잠적(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보도를 통해 최근 독일과 중국 베이징에 파견됐던 북한 해외일꾼 가족이 잇따라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북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이에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위부가 재외 공관들에 ‘도이칠란드(독일)와 베이징에서 여러 가족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며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하였고, 지난 9월 경 독일에 주재하던 한 북한 재외일꾼이 가족과 함께 사라짐에 따라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의 안전대표(보위부 요원)들은 산하 무역 주재원들과 해외 근로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8월 남한드라마 복제·판매한 여성 3명 처형”(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중순 남한 드라마를 복제해 유통한 죄로 가정주부 3명을 처형했다고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예술대학 근처에 거주하던 이들은 남한 TV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복제해 유통한 죄로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8년 1월 KBS2에서 방영한 8부작 드라마는 북한 사회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권력층의 실상과 일반 서민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북, 운전면허증 불법 발급자 처벌(11/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보도를 통해 최근 북한이 인민보안부 호안과(교통과)와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을 대거 처벌했다는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중앙당과 검찰조직으로 이뤄진 강력 조사팀이 인민보안부와 차량등록기관을 검열하고 적지 않은 간부들의 별을 뺐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외에도 검열단이 각 지방보안서 호안과에도 상무조를 파견해 면허증을 불법 발급해주던 당사자들을 줄줄이 파면시켰는데, 이 상무조는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8.3(영터리 운전사) 운전사들 때문에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다”는 불만을 쏟아내자 급증한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덧붙임.

- 또한 소식통은 원래 북한에서 운전면허증을 따자면 6개월 동안 자동차양성소에서 운전기술을 배우고, 수리기술까지 배운 뒤 시험에서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부 호안과장 등에게 뇌물을 주고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하면서 “보안부에서는 신규 운전자의 경우 미화 250달러를 내면 새 면허증을 발급해주었고, 4급 면허 소유자가 10톤급 이상 대형트럭을 몰기 위해 면허급수를 2급으로 올리려면 50달러만 내면 가능했다”고 설명함.

마. 사회 동향

- 북한, 2018 러시아 월드컵축구 예선서 바레인 제압(1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7일 북한이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H조 바레인(115위)과 홈 경기에서 2-0으로 이겼으며, 이로써 5승1무1패가 된 북한은 두 경기를 덜 치른 4승1패의 우즈베키스탄(71위)과 간격을 승점 4로 벌렸다고 보도함.
- “북한 지방도시서 오토바이 개조 삼륜택시 인기”(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지방도시에서 오토바이를 고쳐 만든 삼륜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오토바이 택시는) 2013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운송수단으로 모두 개인이 영업한다”면서 “원래 화물운반용으로 등록했지만 무허가로 사람들을 태우며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방송은 현재 북한 지방도시의 대중교통은 마비 수준이어서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택시는 주로 지방도시의 시내나 도시 근교를 오가며 운행하고, 기름값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야만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함.
- “北 평양 주민, 핸드폰 번호 ‘1912’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11/19,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9일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손전화기(핸드폰) 번호가 북한 내 통신망을 지원하는 고려링크와 강성네트 통신사에 따라 각각 191과 195로 시작한다고 보도하면서 고려링크는 이집트 오라스콤사(社)와 합작한 통신사로

- 평양 등 내륙 지역 통신망을 제공하고, 북한 내 자체 통신사인 강성네트는 평안도를 제외한 양강도와 함경도 등 북부 지역의 통신망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 북수의 소식통은 “최근에는 김일성이 태어난 년도인 1912년을 선전하기 위해 고려링크 번호인 191에 2번을 무조건 넣어서 번호를 사용하라는 당국의 지시로 1912-000-000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이 번호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 “평양 유람비행, 관광객들에 인기”(11/20,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0일 “지금 공화국에서는 평양시내 유람비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유람비행 열풍과 함께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고 보도함.
- 매체에 따르면 ‘평양 유람비행’은 평양 국제비행장을 출발해 대동강과 청춘거리의 체육촌, 두루섬, 미래과학자거리, 주체사상탑, 김일성광장, 만수대 대기념비, 노동당 창건 기념탑, 5월1일 경기장, 미림승마구락부, 장천남 새전문협동농장 상공 등을 거쳐 같은 비행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며, 이 상품에는 40인승 여객기와 10인승 헬기, 3인승 또는 5인승 경비행기가 투입되며 비행 소요 시간은 총 40여 분이라고 알려짐.

■ “北김정은, ‘폭주족 오토바이 타다 걸리면 압수’ 지시”(11/2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0일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신흥부유층인 돈주로 하여금 과시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오토바이를 압수해 지방의 협동농장 등에 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최근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로 취해진 조치라고 보도함.
- 소식통은 “이에 따라 한때 부의 상징으로 여겨 돈주들이 경쟁적으로 구입하던 값비싼 일본산 오토바이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면서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 영예군인들에게 허용된 삼발이 오토바이(3인용)와 일부 특정기관 업무용 오토바이만 제외한 그 나머지 오토바이는 타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청진시, 함경북도 육아원·애육원이 새로 건설됐다고 보도(11.16, 중앙방송)
-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11.18) 70주년 여맹원들의 경축무도회, 11월 18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엄윤철선수,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기록' 갱신(11.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미국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가 정책적 우선순위” 재확인(11/17, 연합뉴스)
 -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날 내놓은 ‘아시아 재균형 공동현황설명서’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행위가 미국과 동맹들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음.
 - 이어 “북한의 확산행위를 억제·탐지·중단시키고, 모든 나라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핵 테러리즘의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민감한 핵물질의 재고를 줄이며, 저장·사용·운반 중인 물질의 안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주요한 성과로 한국과 호주, 일본, 필리핀 등 조약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꼽으며,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전력을 현대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내년 체제과시용 도발 여러 번 할 수도”(11/18, 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에 자신들의 지배체제가 취약해지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번의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음.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CSIS가 발간한 ‘2016 세계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준의 새로운 저장도 도발들”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음.

- 연구원들은 “(북한) 주민과 정권, 그리고 (정권 내) 핵심 지도층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의문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음.
 - 차 한국석좌와 콜린스 연구원은 “새 지도자(김정은 제1위원장) 치하에서 정권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저지를 도발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젊고 예측불가능한 지도자의 오판 여부”가 좌우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미국, 북한 여행경보...7개월 만에 다시 발령(11/2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자로 북한 여행경보를 다시 발령했음. 국무부 영사국은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미국 시민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북한 당국이 자국의 형법을 임의로 적용하면서 체포 또는 장기구금의 위협이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공지했음.
 -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며, 미국 시민은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장기 구금돼왔다.”며 “북한 당국은 비자 없이 북한 영토에 고의 또는 실수로 넘어간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합법적 비자로 입국한 미국 시민까지 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무부는 “북한 당국은 승인을 얻지 않거나 동반자가 없는 여행을 하는 경우, 또 북한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일성 또는 김정일 전 지도자와 김정은 현 지도자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도 북한에서는 범죄행위”라고 밝혔음.
 -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과 외교 또는 영사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 미국 시민에게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이 없다.”며 “평양에 주재하는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병환을 앓거나 부상을 당하고 체포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북한 “일본 군위안부 배상하라” 거듭 촉구(11/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음.
 -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으로 “장장 40여 년 동안 우리 인민에게 방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대변인은 “패망한 지 70년 넘도록 과거청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며 “(일본이 오히려) 강제연행된 조선 청장년을 자원한 사람들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에 대한 청산은 회피한다고 해서 모면할 수 있고 뻔뻔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음.

- 日관방장관, 반기문 방북 소식에 “언급 삼갈 것”(11/16,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반 총장의 방북에 관한 질문에 “유엔 자체가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반응했음.
 - 스가 관방장관은 “어쨌든 북한 문제에 관해 계속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6자회담의 공동 성명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 교도통신은 방북 소식에 관해 반 총장이 대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북한 문제로 실적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1993년 부트로스 갈리 당시 사무총장 방북 이후 22년 만의 방북으로 반 총장이 핵 문제의 진전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북한, ‘을사늑약 110년’ 맞아 日과거사 성토…“강도적 침략”(11/17, 연합뉴스)
 -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침탈한 을사늑약 110년을 맞아 북한이 일본의 침략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강도적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약’이란 정세론 해설을 통해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했다.”고 성토했으며, “을사5조약은 합법적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라며 “일본반동들이 자기의 과거 죄악을 부인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는 절대로 왜곡될 수 없다.”고 지적했음.
-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조선사람을 강제연행해 노예노동을 강요했던 공장, 탄광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 해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왜곡 미화하는가 하면 집권자의 ‘전후 70년 담화’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구까지 빼버려 과거 죄행을 정당화해 피해자인 전체 조선 민족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도 같은 날 ‘을사5조약일 맞아 일본정부에 과거청산 요구’란 보도에서 “일제가 불법 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오늘 우리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안고 일제의 죄악에 찬 역사를 다시금 돌이켜 보고 있다.”며 을사5조약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이어 “백 년 숙적인 일본반동들과 끝까지 피의 결산을 하고야 말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과거 역사의 반성과 청산을 요구했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북한,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11/18,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이 형사공조 분야 주요 협정인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음.
 - 러시아 법무부는 북한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법무장관이 전날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두 조약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 형사사법공조 내용에는 ‘사람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서류의 통지 및 송달’, ‘서류, 그 밖의 기록 및 정보의 제공’, ‘증거물의 제공’, ‘부동산 수색을 포함한 자산의 수색 및 압수’ 등이 포함되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약임.
 - 코노발로프 장관은 “2개 조약 체결은 북한 방문의 주요 결과”라면서 “이 조약들은 러시아 법무부가 여러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 양자 협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어 현재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는 내용을 담은 또다른 형사 공조 조약인 ‘수형자이송조약’ 체결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 기타

- 북한 대사, 유엔서 “인권결의안은 악의적 중상모략”...폐기 요구(11/18, 연합뉴스)
 - 북한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제출된 인권결의안을 강력히 비판했음. 북한의 리홍식 외무성 순화대사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결의안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발의한 유럽연합(EU)과 일본에 폐기를 요구했음.
 - 리 대사는 “결의안은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악의적 중상모략이자,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인권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고, 이어 “우리는 EU와 일본이 즉각 결의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다른 국가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의 결점을 바로잡고, 자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음.
 -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고 강제노동에 관련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자 조작”이라고 주장했음.
 - 또한 “현 시점에서 유엔과 북한의 상호 관계는 좋지 않다.”고 말하며, 이어 “만약 반 총장의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고, 유엔과 북한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과 지원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음.

- ‘반기문 방북’ 성사되면 대화테이블에 어떤 의제 올까(11/19, 연합뉴스)
 - 유엔이 18일(현지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평양 방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공식확인함에 따라 반 총장이,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어떤 의제를 놓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특히 반 총장은 김 제1위원장을 만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 그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으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복귀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선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추진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인권개선 노력을 주문하고, 남북문제에선 8·25 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음.
 - 반면 김 제1위원장은 핵 문제, 인권문제 등 반 총장이 제기할 의제에 대해 기존의 북한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음.
 - 반 총장이 방북 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림. 일각에선 반 총장과 김 제1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결의안 어떻게 다를까(11/20, 연합뉴스)
 -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193개 회원국 가운데 112개국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19개국에 그쳤음.
 -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면서 이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지를 끌어냈음.
 -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들에 대한 무조건적 석방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 촉구한 점이 대표적이며, 올해 한국에 설치된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설립을 환영하고, 지난 10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대규모로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음.
 -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의제로 지난해 채택된 만큼 올해는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12월에 할지, 좀 더 시간을 갖고 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최근 방한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12월 의장직을 맡으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 국무부, 신형 하푼 미사일 한국 판매 허용...1억1천만 달러(11/1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1억1천만 달러(한화 1천288억원 상당)의 신형 하푼 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18일(현지시간) 밝혔음.
 - 앞서 국무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이후인 지난 5월 일본에 같은 모델을 1억9천900만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 신형 미사일은 함정은 물론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데다가, 사거리도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48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기존의 하푼 미사일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을 사용하려고 한다.”며 “특히 현행 무기 재고를 보완하고 한국 해군의 함대지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 국방안보협력국은 이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들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하푼 미사일은 1990년대부터 사용돼왔다.”고 설명했다.

- 한·미, '파리테러 이후' 긴밀 공조...소녀 보건·교육지원 손잡아(11/2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파리 테러 사건 이후 국제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양상의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음.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대(對) 테러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 그는 “한·미 양국은 파리 테러사건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양상의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양국은 오는 30일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담(COP21)’에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고, 이밖에 개도국 내의 인터넷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 개발원조 역량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장점을 결합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 개도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 공통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
 - 조 차관은 “한·미 양국이 보건과 여성,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협력을 피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특히 단순히 수사 차원을 넘어 ‘뉴 프런티어’ 이슈들에 대한 양국의 구상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음.

나. 한·중 관계

- 추귀홍 中대사 “한·중 FTA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11/18,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18일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라고 강조했다.
 - 추 대사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KITA 미래 무역포럼’에서 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그는 ‘2030시대 한·중 협력 방안’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중국 경제는 향후 5년간 6.5%대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연내 정식 발효가 예상되는 한·중 FTA를 적절히 활용하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 재계 “한중 FTA 26일 비준 기대…새로운 기회될 것”(11/18, 연합뉴스)
 -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활동에 들어가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음.
 - 수출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무역업계도 한중 FTA 국회 비준 처리 움직임을 반기고 있음.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코트라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FTA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 확산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중 FTA는 발효 시점에 따라 관세 인하 혜택에 차이가 나는 만큼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임.
 - 주요 기업들은 한중 FTA가 미칠 득실 계산에 몰두하면서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임. 일부 업종에서는 중국 수출로 인한 이익보다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음. 자동차의 경우 초민감품목으로 FTA 양허안에서 제외됐고 선박 등은 현재도 관세가 없음. 가전제품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빠져있음.

- 3차 한중 FTA 무역촉진단 상하이·우한 공략(11/18, 연합뉴스)
 -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꾸려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촉진단이 중국 상하이와 우한을 찾아 화장품, 생활가전 시장 진출을 모색했음.
 -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 29개 무역업체로 구성된 제3차 한중 FTA 무역촉진단을 중국으로 파견했다고 18일 밝혔음. 20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무역촉진단은 17일 상하이에 이어 19일 우한에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함.
 - 이재출 무역협회 전무는 “한중 FTA는 경쟁력이 있는 우리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해외시장 개척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음.

- 시진핑 “중국, 외국인투자 진입제한 대폭 철폐할 것”(11/18,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중국이 앞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 제한을 대폭 철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와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의 조기 창설을 주창했음.

- 그는 “중국의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계 투자기업이 합법적 권익 보호나 각국 기업의 중국투자 시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높은 기준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으며, “중국은 앞으로 개혁의 힘을 더욱 강화하면서 효율·질량, 공정과 공평, 개혁·개방에 더욱 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개선도 거론했음.

■ 시진핑 “아태 상생협력 위해 자유무역지대 조성하자”(11/19,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의 기관차인 만큼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태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제의했음.
- 그는 장기적 안목으로 중장기협력전략의 큰 틀을 만들자면서 개방적 경제를 위한 아태 자유무역지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와 더불어 도시화, 인터넷경제, 청색경제(블루이코노미) 등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자고도 제안했고, 또한 아태 경제 성장동력 구축에 개혁과 혁신이 요구된다고 발전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경제구조 조정 및 혁신의 발걸음을 재촉하자고 했음.

■ 중대사 “한중 협력, 서로 장점 키우고 리스크 줄일 것”(11/20, 연합뉴스)

-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20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힘을 잃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강화는 서로 장점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추 대사는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한반도, 협력과 발전의 길’ 국제 포럼과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양국은 경제구조가 서로 보완적이고 발전전략에서도 부합하는 측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가 이미 실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일대일로는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는 효과적 무대가 될 것이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각국에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리우지아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에 있어 북한이 갖는 안보적 가치는 매우 명확하다.”면서 “중·북 관계의 마지노선은 북이 스스로 붕괴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아베 “日분위기 호전…모멘텀 이어지길”, 차 “그러길 기대”(11/1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터키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한일정상회담 이후 분위기와 양국관계 개선을 소재로 덕담을 교환했음.
 - 아베 총리는 이날 박 대통령을 만나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와서 (한국 측이 베푼) 후한 대접과 환대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며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내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이에 박 대통령은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으며, 또한 “따뜻한 말을 들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나도 기쁘다.”며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 日극우 이시하라 “군위안부, 역사 이름 빌린 조작” 또 망언(11/16, 연합뉴스)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眞太郎83) 전 일본 도쿄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 이시하라 전 지사는 16일 산케이 신문에 실린 칼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이름을 빌린 보복의 조작”이라고 썼으며, 그는 “당시 인구 2천만 명밖에 없었던 조선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젊은 여성을 관헌이 정말로 납치했다면 당시 조선의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냐”며 이런 주장을 폈음.
 - 이시하라는 칼럼에서 “일본의 조선통치는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들의 의회가 재결(裁決, 결정)해 스스로 소망해서 이뤄진 합병”이라며 “그에 의해 조선의 근대화가 진전해 러시아 속국이 되는 것을 면했다.”고 해석하기도 했음.
 -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는 성가신 것이 된다. 저것은 이승만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한 선 굵기로 머지않아 반드시 난처한 불씨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지금 서로 다이너마이트(폭약)라도 장치해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시마네현 지사, 日정부에 ‘독도 영유권 ICJ 단독제소’ 촉구(11/17, 연합뉴스)
 - 독도의 관할권을 주장해 온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미조구치 켄베에(溝口善兵衛) 지사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제소해달라고 17일 촉구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조구치 지사는 이날 일본 내각부에서 시마지리

아이코(鳥尻安伊子) 영토문제담당상을 만나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일본 정부가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망서를 전했으며, “무엇이 가능한지 (현과) 잘 상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혼자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지 않음.
- 미조구치 지사는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격상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시마지리 담당상은 “정부로서는 냉정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 고노 “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으로 지극히 중대”(11/17, 연합뉴스)

-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은 최근 한중일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으로 봐도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 관방장관 시절인 1993년 군위안부 제도에 일본군과 관(官)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한 고노 전 의장은 지난 10일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한·중·일 3국 기자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 고노는 “전쟁 중에 군대와 민간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므로 민간 여성에게 매우 가혹한 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추측된다.”고 말했으며, 아베 정권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납치 형태의 군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의 사례를 거론하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日외무성 당국자 “위안부 최종해결은 피해자 수용여부에 달려”(11/18, 연합뉴스)

- 군위안부 문제의 실무 당국인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지역정책과 당국자는 18일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 시민단체인 ‘위안부 문제 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의 최종 해결이 될지 어떨지는 (해결안이) 피해자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네트워크 관계자가 밝혔다.
-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일본 외무성이 군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정부 당국 간의 정치적 타결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일본 외무성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였음.
- “아베, 박대통령 면전서 위안부 타결조건으로 소녀상 철거 요구”(11/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는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했음.
 - 그는 이달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현재 재건축 중)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음.
 - 일본 정부는 한국이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응하면 2007년에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책으로 일본이 1990년대에 만든 기금)의 후속 사업을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며 총리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안도 선택지로 둘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 앞서 교도통신도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사실상 위안부 협상 ‘조기 타결’ 조건으로 내건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소녀상 철거에 대한 확약을 얻은 다음 아시아여성기금 후속사업 예산(2014회계연도 기준 약 1천 300만 엔<약 1억 2천만 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으로 최종 타결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시진핑, 미국 겨냥해 “거시정책 결정시 타국 영향 고려해야”(11/16, 연합뉴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바, 이는 사실상 금리인상 조치를 앞두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주장이며, 미국 금리인상이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중국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됨.
 - 시 주석은 “G20 회원국은 전 세계 경제총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상호 정책 간 소통과 협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스펀오버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이 취한 재정통화 조치는 어느 정도 시장안정과 경기반전에 일조했지만 7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더디고 성장이 미흡하다.”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절대 하루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음.
 -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최근 5개년 발전 청사진인 13차 5개년계획(13·5 계획)을 마련했고, 신경재구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세계경제에 거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근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남중국해 갈등 제쳐놓고 미중 육해군 합동훈련 돌입(11/17,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갈등을 제쳐놓고 일련의 합동훈련에 들어간다고 AP, AF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미국 국방부는 양국 육군이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루이스 매코드 기지에서 함께 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합동훈련은 중국에서도 같은 시간에 진행됐음. 미국 해군의 구축함 스테덤은 전날 중국 상하이 우쑹 군항에 들어와 이날 중국 해군과 훈련을 함께 치렀으며, 일주일로 계획된 훈련에는 교신, 해상구조, 합동수색과 같은 인도주의 프로그램이 포함됐음.
 - 스테덤 함장인 해리 마시는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방문”이라며 “경험을 전수받고 상대 활동의 의미를 알면 작전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G20서 시진핑에 ‘덕담’ 건넨 오바마, APEC서 ‘돌변’(11/17, 연합뉴스)
 - G-20 정상회의(14~16일) 무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덕담’을 건넸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을 겨냥한 견제 행보를 보였음.
 -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도 G-20 정상회의 무대인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를 방문할 일이 기대된다고 미국도 중국이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18~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의 첫 행보는 대중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음.
 - APEC 정상 집결...오바마 첫 일정 필리핀 함정 승선 ‘중국 견제’(11/1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 도착한 직후 마닐라만에 있는 필리핀 해군 함정 ‘그레고리오 델 필라’ 호에 승선, 장병을 만나고 필리핀 해양 안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음.

-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루는 필리핀과의 군사공조, 남중국해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과시하려고 오바마 대통령의 필리핀 첫 일정을 이같이 잡은 것으로 풀이됨.
 -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 해군에 미국 해양 경비정 1척과 조사선 1척을 추가로 양도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을 열어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안보·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
 - 이에 앞서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국에 추가적인 매립 활동과 새로운 시설의 건설, 군사 시설화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中, 남중국해 공중훈련 또 공개…“새 비행장서 실시돼”(11/18, 연합뉴스)
 - 중국이 또다시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해상 공중훈련 장면을 공개했음.
 -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18일 중국 해군 소속 남해함대 항공병 모 부대가 전투력 훈련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을 비롯해 조종사, 관제탑 표정 등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했으며, 이들 사진에 대해 부대원들이 책임감을 다하는 정신에 따라 승리를 위한 거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훈련이 “새로운 비행장”, “완전히 새로운 훈련 구역”에서 이뤄졌다고 전했지만, 이런 표현이 남중국해에 새로운 군용 활주로를 건설했음을 뜻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으며, 이 훈련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전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음.
 - 中 “남중국해 섬 무력으로 빼앗을 수도…극도 자제력 발휘 중”(11/18, 연합뉴스)
 - 18일 상하이포르의 친중국 성향 신문 연합조보(聯合軍報)에 따르면 류전민(劉建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섬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도 있다고 전날 밝히고, 주변국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력 동원을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중국은 주변국에 불법으로 침탈당한 도서와 암초를 수복할 권한과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남중국해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 건설 문제는 “일부 국가가 다른 뜻을 품고 조작한 가짜 의제”라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해역의 군사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일로 주변국들도 이 해역에서 도서·암초를 불법 침탈하거나 공항, 도로, 부두 등을 포함한 수많은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공섬 내 활주로 건설과 관련해 그는 “이처럼 긴 활주로는 민간 항공기의 이착륙용”이라며 “활주로를 짧게 건설하면 민간기는 이착륙을 못하게 되는데

이것(짧은 활주로)이야말로 군사용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으며,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말레이시아 회의에서 다루고 싶지 않지만 과거 2년의 경험에 비춰 각 국가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끄집어낼 것이고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시진핑, APEC만찬서 90초간 ‘번개회동’(11/19, 연합뉴스)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예정에 없던 ‘번개 회동’을 가졌다고 알려졌으며, CCTV는 “두 정상이 1분 30분 초 가량 열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中해군사령관, 美태평양함대 사령관에 ‘재도발 말라’ 일격(11/20, 연합뉴스)
 - 중국군 고위당국자가 중국을 찾은 미군 고위 당국자에게 ‘다시는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음.
 - 20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관은 전날 중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과의 회동에서 미 군함이 최근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에 접근한 점을 거론하며 “중국의 주권 권익을 엄중하게 도발했다.”고 비판했음.
 - 또 미군의 이번 작전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제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썬영사군도)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했다.”며 미국은 자신들의 주장으로 다른 국가를 강압해서는 안 되며 타국의 주권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중국 해군은 미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 밀접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며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고 양국관계의 대국(大局)에서 출발해 극도로 자제했다.”며 만약 미국이 다시 도발한다면 “우리가 국가주권과 안전을 수호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바. 미·일 관계

- 일본 방위상 진주만 방문 추진…화해·평화 부각할 듯(11/17,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방문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7일 보도했음.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달 22일 호주에서 일본과 호주의 외교·방위 각료(2+2) 회담을 마친 후 하와이로 이동해 진주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음.

- 나카타니 방위상은 올해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진주만 방문을 검토했으나 일정 문제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이 진주만 방문을 추진하는 것에는 전쟁 상대국가였던 미국과 일본이 전후 70년을 맞아 화해했고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여겨짐.

■ **日중앙정부 對 오키나와 미군기지 갈등 법정공방 비화(11/17, 연합뉴스)**

- 미군기지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음.
- 일본 정부는 17일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다케시 지사의 처분을 철회하는 대집행 행정소송을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이와 관련, 오키나와현은 지사가 단행한 매립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이시이 게이치 국토교통상의 결정에 맞서 제3자 기관인 국가지방계쟁 처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음.
- 2013년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당시 오키나와현 지사가 헤노코 매립 승인을 결정했지만 이듬해 지사 선거에서 나카이마를 누르고 당선된 오나가 지사는 지난달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다며 승인 취소를 결정했음.
- 그러자 공사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이 처분에 불복한다며 국토교통상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음. 국토교통상이 지난달 27일에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중앙 정부는 대집행 절차 착수를 결정한 뒤 2차례 걸쳐 매립 승인 취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오나가 지사는 모두 거부했음.

■ **고노 “오키나와 상대 日정부 소송은 지방자치 부정”(11/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인식을 질타해 온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은 오키나와의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음.
- 18일 NHK에 따르면 고노 전 의장은 일본 정부가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 매립 승인 취소에 맞서 소송을 낸 것에 관해 “오키나와 지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日집권당 의원, 위안부 소녀상 설치 저지위해 내달 미국행(11/18,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방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아키바 겐야(秋葉賢也) 전 자민당 외교부 회장(현직 중의원)은 다음 달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를 방문하여, 샌프란시스코 시 간부를 만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올해 9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일본 내 우파들은 미국 등에서 소녀상 설치 움직임이 확대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마·일 남중국해 공조 확인...아베, 자위대 파견 “검토”(11/2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공조하겠다는 뜻을 양자 회담에서 확인했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마닐라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양측은 남중국해에서 항행(航行)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적인 규범, 해양의 과제, 항행의 자유에 관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미국의 구축함 파견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현상을 변경하는 일방적 행위를 모두 반대한다.”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을 비판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정세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음.
 -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각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며 “한·미·일 사이에 강력한 3자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백악관 공동취재단이 전했다.

사. 미·러 관계

- 푸틴-오바마, 터키 G20 회의장서 별도 양자회담(11/16,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막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음.
 - 두 정상은 G20 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신흥국 모임 브릭스(BRICS) 정상들 간 회동이 끝나고 G20 정상들의 업무 만찬이 시작되기 전 시간에 별도로 만났고, 통역만을 대동한 채 G20 회의장 내 소파에 마주 앉아 약 2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파리 테러 이후 긴박한 현안으로 떠오른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등 국제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대처 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됨.

- 미국-러시아, IS 테러 대응 방안 두고 여전히 ‘삐걱’(11/18, 연합뉴스)
 - 러시아와 서방이 공동의 적인 IS 격퇴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협력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임.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APEC 회의에 참석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는 서방과의 협력없이 독자적으로 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며 서방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그 경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에 있다.”라고 지적했음.
 -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지원을 그만두고 IS 격퇴전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음. 그는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시리아 사태 논의 국제회의가 보여주듯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 파트너다.”고 밝히면서도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이견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과거 테러와 러시아 여객기 테러의 배후가 IS임이 드러난 이상 러시아는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IS 근거지 파괴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시리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만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음.

- 미·러, IS 석유티럭 수백 대 공습…‘돈줄’ 끊기 가속(11/20,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이슬람국가’(IS)의 돈줄인 원유 밀매를 끊기 위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Tu-22 중거리 목격기들이 IS 유티럭시설들과 보급창들을 목표로 12발의 미사일 공격과 폭탄 공습을 했다고 밝혔음.
 - 앞서 미군은 지난 16일 시리아 동부 아부 카말 부근의 IS 기지를 공습해 석유 트럭 116대를 파괴했다. 미 공격기들은 공습 45분 전에 “석유 트럭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으니 빨리 트럭에서 피신하라”는 내용을 담은 아랍어와 영어 경고 전단을 살포했음.
 - 이와 관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IS의 석유 트럭을 집중 공격한 것처럼 전술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연합군의 공습 및 현지 군대의 지상작전과 함께 IS의 석유 트럭을 집중 공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기문, ‘IS 대응’ 미·러 공조해야…오바마 “러시아 도움될 것”(11/22,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음.

-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IS 격퇴 결의안 통과에 이어 반 총장뿐만 아니라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역할을 언급해 IS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반(反) 테러’ 전선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반 총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모든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 이념에 물든 자들은 인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한다.”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공조해달라고 강조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러시아가 시리아 온건반군이 아니라 IS만 뒤쫓는 전략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바사르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교체에도 동의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음.

아. 중·일 관계

- 아베, G20서 中 남중국해 행보 견제 박차(11/16,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중국의 인공섬 조성 등으로 부각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또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부연했음.
 - 더불어 아베는 15일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에는 과잉 생산설비의 해소를 시작으로 하는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세계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경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시진핑과 회담 불발’ 아베, 대만 前부총통과 회담(11/19,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샤오완창(蕭萬長) 전 대만 부총통과 회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계기로 샤오 전 부총통과 만났고, 샤오 전 부총통은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특사 자격으로 APEC에 파견됐음.
 -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개최된 양안(중국-대만) 정상회담에 대해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또 대만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를 이유로 실시 중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음. 양측은 경제 및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했음.

- 반면, 아베 총리는 APEC을 포함한 다자회의 계기에 중국 정상인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지난 1일 서울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을 때 가을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 中, 아베의 '남중국해 자위대 파견' 언급에 "고도로 경계"(11/20, 연합뉴스)

- 중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남중국해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해 "일본이 남해(남중국해) 문제에 끼어들고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남해에 '복귀'하는 것을 고도로 경계한다."고 밝혔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일본은 제2차 대전 때 남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 중국은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이 끝난 이후 이들 도서를 수복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일본은 마땅히 역사를(마음에) 새기고(과거사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아베 총리는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남중국해 공조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남중국해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 홍 대변인은 미국을 겨냥해서도 "중국은 유관 국가가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빌미로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고 지역을 군사화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자. 중·러 관계

■ 브릭스 "G20 내 거시경제 공조 시급하다."(11/16, 연합뉴스)

- 브릭스 국가들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국(G20) 내 선진국과 신흥국 간 거시경제 정책 공조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 브릭스는 이날 터키 안탈리아의 G20 정상회담 와중에 별도로 회동하고 나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 성명은 세계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지속적이지 않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거시경제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경기 침체의) 부정적 전이를 막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한 G20 내 정책 공조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복잡한 구조와 순환적 문제가 우리(브릭스)와 세계 경제 모두를 위축시켰다."고 강조했다.

- 시진핑-푸틴 또 정상회담해 미국 견제…“국제질서 더 공정하게”(11/17,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음.
 -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5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 안탈리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현재의 국제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우회적으로 겨냥했음.
 - 시 주석은 “양국은 광범한 영역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주 많은 국제 문제에서 서로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호응했음.
 - 두 정상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 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의 연계 발전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 시 주석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서로 연결돼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 “중-러, Su-35 첨단전투기 24대 구매계약…2조3천억 원대”(11/19,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제 최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35 거래 계약을 마침내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음.
 -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와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Su-35 24대를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음.
 - 쉬치량(許其亮)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15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의 콤포몰스크나야무레에 있는 Su-35 생산 공장을 둘러본 뒤 17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투기 구매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계약은 러-중 양국 사이에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쟈(殲)-20(J-20)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울 구상으로 Su-35 전투기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Su-27과 Su-33을 거의 복제하다시피 해 자국 주력 전투기 기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일·러 관계

- 푸틴, 연내 방일 사실상 무산…“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문”(11/16,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쿠릴 4개 섬(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를 풀고자 추진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이 무산된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터키 안탈리아에서 회담하고 푸틴 대통령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음.
 -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방일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늦추는 방향으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며, 특히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를 인용,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푸틴의 방일이 상당기간 미뤄질 것임을 시사했음.
 - 아베 총리는 북방 영토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수차례 회담했으며 그를 일본으로 초청하는 등 대화 진전을 적극 모색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대열에 동참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지 않고 있음.
 - 아베 총리는 15일 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외무차관급 협의가 지난달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음.

- 자민당 역사검증 시도 러시아도 비판…“역사수정 움직임”(11/18, 연합뉴스)
 -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자민당이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 등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 하는데 대해 “역사수정의 움직임이 슬며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역사 검증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그는 이어 역사 검증 위원회 설치 준비 자체가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역사수정의 조류)를 충분히 상징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한국드라마 복제·판매여성 3명 처형”(11/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9월 8일 보도를 통해 양강도 혜산시에서 가정주부 3명이 비공개로 처형됐음을 전한 바 있음.
 - 그 당시에는 이들이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한 죄로 처형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 하지만 최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남한 드라마를 복제하고 유통시킨 죄로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북한이 노동당창건 70돌을 맞으며 ‘대사면’을 결정한 7월 14일 이후에 체포돼 사형을 면치 못했다며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두려워 처형된 여성들이 불법영상물을 유통시켰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영상물은 한국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였으며, 중국산 소형 메모리칩(USB)에 한국드라마를 저장해 개당 북한 돈 30만원씩 받고 몰래 유통시켰다고 그는 말했다.
 -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과 연계된 불법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소 3년부터 7년까지의 교화(교도)형에 처해 진다”며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죄로 사형까지 당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 이 여성들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인민반회의에서 주민들에게 경고차원으로 알려주었을 뿐 실제 처형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더욱이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죄로 가정주부들을 처형했다는 말에 많은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 북 해외일꾼, 독일·중국서 잇따라 잠적(11/18,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독일과 중국 베이징에 파견됐던 북한 해외일꾼 가족이 잇따라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북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연락이 닿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국가보위부가 재외 공관들에 ‘도이칠란드(독일)와 베이징에서 여러 가족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며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에 독일에 주재하던 한 북한 재외일꾼은 가족과 함께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의 안전대표(보위부 요원)들은 산하 무역 주재원들과 해외근로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음.
 - 하지만 소식통은 실종된 북한 재외 일꾼들이 외교관인지, 아니면 돈 벌러 나온 외화벌이 일꾼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또 실종된 이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출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한국 국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북한 해외 주재관들이 2013년에 8명, 2014년에는 18명, 올해 10월까지 20명이 귀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처럼 북한 해외 주재원들의 잠적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김정은 정권 들어 지난 4년 동안 근 70여명의 고위층들이 무자비하게 숙청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임.
- 북한, WHO 지원 아래 전국적 결핵조사 첫 실시…미화 150만 달러 예산(11/18, 미국의소리)
- 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유엔 산하 유니세프가 밝혔음.
 -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앤드류 브라운 대변인은 지난 6월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예비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세계 결핵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키 연구원은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과 유병률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음.
 - 북한 내 57개 도시와 38개 농촌 지역, 그리고 5개 특별지정 구역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그 중 15세 이상 주민 70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임.
 - 이들은 개인면담과 흉부 X선 검사, 결핵균 검사(객담 도말검사) 등을 통해 결핵 감염 여부를 검사 받게 됨.

- 유니세프의 브라운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미화 140만 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90만 달러를 세계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북한 보건성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설비 등은 세계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유니세프가 모두 구입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음.
- 북 주민, 식수난 자체해결(11/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수도물이 아침과 저녁(2시간)에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하지만 최근에는 전력사정이 악화되면서 수도물공급이 자주 끊겨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자 청진시 주민들이 필요한 물을 자체로 해결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음.
 - 청진시의 한 주민소식통은 시에서 세대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왜정(일제) 때 묻은 낡은 수도관과 전력부족, 약한 수압으로 주민들이 수도물을 원만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매일같이 날이 밝으면 청진시 수남구역 추목동에 위치한 수원지로 향하는 주민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며 이들은 보통 10리~15리의 거리를 걸어서 물을 길어 나른다고 언급했음.
 - 소식통은 청진시는 하루에 두 시간의 수도물 공급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약한 수압 때문에 아파트 1층 외에는 수도물을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음.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약한 전력과 수압으로 물 부족현상이 계속되자 청진 시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최근 자체로 양수기를 구입, 설치해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음.
 - 소식통은 양수기를 설치한 아파트 주민들은 물을 비교적 풍족하게 사용한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배격...적대세력의 모략 책동”(11/21, 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며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전형적 실례인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을 우리에게 대한 극단한 정치적 도발 문서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대변인은 “결의안 강압 채택 높음은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린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인권 모략 책동의 본질과 부당성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난했음.
 - 이어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비극적인 사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실로 감행되는 내정간섭을 허용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며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모략에 강경 대응하는 우리 입장이 천백 번 정당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우리는 인권 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만 불순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그에 맞는 해당 조치들을 강구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독일서 북한인권주간 행사…北실체·인권참상 전파(11/22, 연합뉴스)
-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북한인권 영화를 상영하는 동시에 북한 전문가의 견해를 전파하고 탈북자 증언을 통해 실상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음.
 -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연구위원은 11월 21일 저녁 베를린 시내 ‘시티 키노 베딩’에서 열린 ‘북한인권주간’ 부대강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김씨 일가의 왕조체제라고 북한체제를 규정하고 김정은 체제가 지금은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했음.
 -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의 수령독재 시기를 지나 1997년 대기근을 거치면서 국가소유와 계획경제를 뼈대로 한 사회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회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개별소득의 구성을 보면 국가나 국영회사에서 나오는 비중은 7%에 불과하고 사적 시장 비중이 나머지 93%라고 전하면서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국가라고 진단했음.
 - 또한 북한 실상에 관해 증언한 탈북자 출신의 안명철 NK위치 대표는 “지금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 6곳에 12만 명이 감금돼 있다”면서 “이런 공포정치 때문에 북한에선 데모나 쿠데타, 봉기 한 번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에서 8년간 수용소 경비대원을 했다는 안 대표는 “과거 공개처형은 AK소총으로 했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선 탱크나 헬기 공격에 사용하는 대공포로도 하고 사체를 처리할 공간도 없어 화염방사기로 태운다”면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음.

2. 북한인권

-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23일 한국 방문(11/18, 연합뉴스)
 -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이 23일부터 27일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그의 마지막 공식 임무가 될 것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역할을 맡아온 다루스만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제도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다루스만 보고관은 닷새 동안의 한국 방문 기간에 정부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며, 오는 26일 오후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기자회견도 할 계획임.
- ‘ICC회부 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위원회 통과(11/20,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음.
 - 제70차 유엔 총회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1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음.
 - 이는 2005년 이후 유엔 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11차례 이뤄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찬성표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 결의안은 12월 중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통과가 확실시됨.
 - 북한의 리홍식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1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며 폐기를 요구했음.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점’을 규탄했음.

-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했음.
 - 특히, ‘적절한 조치’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 올해에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음.
 -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는 요구도 작년보다 강조됐음.
 -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안정·화해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음.
 - 그러나 최명남 주재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에 앞서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을 포함해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면서 “탈북자의 새빨간 거짓말을 포함해 모두 왜곡과 날조로 채워져 있다”고 반발했음.
 - 유엔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이 회의를 소집해 북한 인권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정부 “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환영”(11/20, 연합뉴스)
-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음.
 - 정부는 20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제7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 이어 “이번 결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음.
 -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10년 묵힌’ 北인권법, 유엔 인권결의로 탄력 받나(11/22,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 인권결의안이 최근 채택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됨.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표차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 인권의 심각성이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새삼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임.
 -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법률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과 함께 북한인권법을 주요 안건에 올리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음.
 -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그동안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했지만 지난 9월9월 문재인 대표가 “인권은 이념이나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히는 등 협상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
 - 새누리당의 제정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하는 것이 골자임.
 -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부분으로서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에 두도록 했음.

3. 탈북자

- 미네소타 NGO “탈북자 정착 지원”(11/18, 자유아시아방송)
 - 미네소타 주에 위치한 비정부기구 ‘Freedom for North Korean Refugees’는 지난 달 키이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하원의원, 산드라 패퍼스 상원의원, 잭 랜들러 전 국제앰네스티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탈북자의 미국 생활과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위한 정책 고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움을 열었음.
 - 이 토론회를 주최한 현 김 대표는 미국 미네소타 주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탈북자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경제적 지원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전했음.
 - 이 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랜들러 국제앰네스티 전 대표는 미국 미네소타의 상하원 의원들, 국무부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의 어려움과 정책적 보완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음.

- 탈북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의지를 뚜렷이 보일 경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랜들러 대표는 또, 세계적인 인권 단체인 ICNK와 연대를 맺어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알리고, 정책 마련 시 반영케 하겠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아직 미국에는 아직 북한과 탈북자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탈북자 9명 강제 복송 위기”(11/18,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을 막기 위한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음.
 - 서울에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탈북자 9명이 지난달 하순 베트남에서 체포된 후 중국 공안에 넘겨져 현재 복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 이 단체의 신경숙 국제협력팀 간사는 “체포된 9명 중에는 북한의 중간급 간부와 한 살짜리 아기도 포함됐다”면서 이들은 현재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길림성) 투먼(도문)에서 “복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 남한의 외교부는 “탈북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탈북자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이해바란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을 삼갔음.
 - 그러면서도 외교부는 “정부로서는 탈북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복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애초 10명이던 탈북자들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북부의 중국 접경지역인 몽카이에서 베트남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일행 가운데 중국 국적 어린이 1명이 풀려나 현재 복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자는 9명으로 알려졌다.
- 탈북 남녀 7명 태국 도착(11/19, 자유아시아방송)
- 태국 이민 경찰 당국이 소형 보트를 이용해 메콩강을 건너 태국 국경을 넘으려던 탈북자 7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19일 관영 ‘타이 P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밤 태국 북부 라오스 접경 시골마을인 농 카이 지역 메콩강에서 당국에 붙잡혔음.

-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2-75세의 남자 넷, 여자 세 명의 탈북자들도 강에 뛰어들었지만 얼마안가 경찰에 붙잡혔음.
 - 현지 경찰은 탈북자들이 1만5천 바트(약 400 달러)와 약간의 중국 돈을 갖고 있었지만 여권 등 신분증은 없었다고 전했다.
 -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 대사관의 통역 지원을 통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건너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이들이 현재 불법 입국 혐의로 인근 반두 경찰서에 인계됐다고 보도했음.
 - 하지만 태국 정부가 이제껏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송 대신 한국 등으로 보내왔다고 전해 이들 역시 절차를 밟은 뒤 제3국으로 보내질 것임을 암시했음.
-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 우려 높아져(11/19, 자유아시아방송)
- 남한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남측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는 태도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기 보다는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임.
 - 그런데 10월 22일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의 공안 당국에 넘겨진 탈북자 9명을 북한과 접경 지역인 지린성(길림성) 투먼(도문)으로 옮겨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
 - 이미 남한 언론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등으로 악화됐던 북중 관계가 최근 들어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탈북자 정책 변화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음.
 - 서울외신기자클럽이 19일 주최한 어느 토론회에 참석한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도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들어 한반도 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감지된다”면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과거로 회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음.
- 유엔 “중국·베트남에 탈북자 북송 규명 요구”(11/21, 연합뉴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1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음.

-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 살짜리 아기와 10대 등이 포함된 탈북민 9 명이 이미 북한으로 송환됐거나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국적 탈북민 9명, 그리고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 1명 등 10명이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이어 며칠 뒤 중국의 베트남 접경도시인 등싱으로 송환된 뒤 지난 17일 선양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그 후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만 남겨진 채 9명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탈북민 9명이 이미 북송됐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베트남 당국에 “박해의 위험이 있으면 망명자를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농르폴망’ 원칙에 따라 탈북민 강제송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중국과 베트남 당국을 접촉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국제인권단체 “중국, 탈북자 9명 북한송환 막아야”(11/22, 연합뉴스)
- 지난달 말 탈북자 9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들의 북한 송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11월 21일 휴먼라이츠워치는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은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처형을 비롯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행위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중국은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 탈북자 9명을 안전한 제3국으로 재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탈북자 9명의 강제 북송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19일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 난민의 장기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 유엔 난민기구와 인권이사회 등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전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이들 탈북자를 선양 인근으로 이동시켰고 이는 탈북자들의 북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과 베트남 당국이 탈북자들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중, WFP 대북식량지원 100만달러(11/17,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이 북한주민의 영양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음.
 - 세계식량계획이 인터넷으로 공개한 최신 대북사업 자금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100만 달러를 기부했음.
 - 2010년 이후 중국이 유엔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자금은 모두 500만 달러임.
 - 2011년 100만 달러, 2012년 200만 달러, 2013년 100만 달러, 그리고 이달 초 100만 달러 등 모두 500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에 지원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중국의 지원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량가공공장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강화 비스킷을 만드는 재료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